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5. 1. 13.



국토교통부

순서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	1
II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3
III. 2025년 핵심 추진과제	5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	16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1 주요 정책성과

- (주거 안정)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, 서민 주거지원 강화
 - (공급 기반)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*,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('23.12), 신규택지 후보지 21.5만호 발표 등을 통해 공급 기반 확충
 - * 안전진단 통과단지 ('18~'22平) 13 → ('23) 163개소 / 정비구역 지정 36 → 56개소
 - (주거 안정) 주거급여 확대*,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등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,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('23.6)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
 - * 주거급여 ('22) 135만 → ('24) 148만 / **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, 고령자복지주택 등
 - **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 25,578건, 주거·금융·법률 등 22,377건(9,711억원) 지원
 - (시장 안정) 부동산 규제 정상화*, PF 공적 보증 확대(35조원), 건설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
 - * 규제지역 해제, 전매제한 완화, 중도금 대출규제 폐지, 청약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
- (교통 혁신) 교통 인프라 확충,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
 - (출퇴근 편의) GTX-A 개통*('24.3)으로 본격적인 GTX 시대* 개막,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권역별 교통개선 대책으로 교통편의 제고
 - * (수서-동탄) 소요시간 75 → 21분, 일 평균 1.4만명 이용, (운정중앙-서울) 소요시간 66 → 22분
 - (간선교통망) 중앙선, 서해선, 동해선 개통으로 철도 간선축 완성, 고속도로 11개 구간(363km)을 개통하며 총연장 5천km 완성
 - (교통안전)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(매년 수립) 등 적극적인 안전 관리로 역대 최소 교통사고 사망자 갱신
 - * 교통사고 사망자 : ('21) 2,916명 → ('22) 2,735명 → ('23) 2,551명
 - (서비스 제고) K-패스 출시('24.5)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,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충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
 - * (K-패스) 265.8만명 이용, 월 1.8만원 환급('24.12), (콜택시) 법정대수 비 ('22) 93.0 → ('23) 101.4%

- **(경제 활력)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, 국토교통 산업 혁신**
 - **(지역경제) 신규 국가산단 15개소 발표***(‘23.3), 지방관 ‘판교 테크노밸리’ 조성을 위한 **도심융합특구법** 제정(‘23.10) 등 성장거점 기반 조성
 - * (국가산단)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 승인 조기화(‘25.3 → ‘24.12) 등 신속 추진
 -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**GB 혁신방안** 발표(‘24.2), 한국형 White Zone인 **공간혁신구역 도입**(‘24.2) 등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화
- **(산업 활력)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통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으로 3년 연속 수주실적 증가***, 총 누적 수주액 **1조불 달성**(‘24.12)
 - * 수주액 : (‘21) 306억불 → (‘22) 310억불 → (‘23) 333억불 → (‘24) 371억불
- 한국형 고속열차 해외 첫 수출(‘24.6, 2.7천억)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
- 모빌리티혁신법(‘23.4), UAM법 제정(‘23.10), 자율주행 시범운영 지구 전국 확대(‘23.11) 등 미래 혁신 기반 마련

2 개선 필요사항

- **(안전사고) 안전 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, 안전사고 반복**
 - 특히,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(‘24.12)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되고, 건설현장 사고는 감소 중이나 여전히 산재의 절반 수준
 - * 건설현장 사망자 수(CSI 기준): (‘21) 271명 → (‘22) 238명 → (‘23) 244명 → (‘24 잠정) 204명
- **(경기 침체) 건설경기 회복 노력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건설업계 폐업 증가, 건설 취업자 감소 지속 우려**
 - * 건설투자 증감률 : (‘23) 1.5% → (‘24^e) -1.3% → (‘25^e) -1.3% → (‘26^e) 2.7%
 - ** 건설사 폐업 : (‘22) 1,454 → (‘24) 2,085개, 취업자 수 : (‘22) 212 → (‘24.11) 209만명
- **(균형 발전) 지방 일자리,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, 수도권 - 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**
 - * 수도권 GRDP 비중 : (‘07) 49.6% → (‘12) 49.3% → (‘17) 51.3% → (‘22) 52.4%

II.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추진 여건

- (민생) 일상 안전, 주거 안정, 교통편의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
 - (안전) 교통·항공, 시설물 등 일상생활에 대한 안전의 위협으로 국민 불안이 증가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
 - (주거)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경기회복 지연 등 공급여건 악화 시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
 - * 주택 인허가(만호): ('20) 45.8 ('21) 54.5 ('22) 52.2 ('23) 42.9
 - (교통) 수도권 - 지방 간 교통 격차 해소 및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질 좋은 교통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
 - * 지역간 대중교통 사각지역 비율 : (특·광역시) 0%, (경기도) 2%, (지방) 13.6%~46.7%
- (거시) 안정적 경제 성장과 함께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 대응 필요
 - (경제)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, 글로벌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
 - * 실질 GDP 성장률 : ('23) 1.4% → ('24^e) 2.1% → ('25 전망) 1.8%
 - (사회) 지방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위기 대두, 수도권은 과도한 집중에 따른 경쟁압력 증가로 집적불경제 발생
 - * (소멸위험 '24.8월) 229개 기초지자체 중 131곳 ('23년 합계출산율) 수도권 0.67, 비수도권 0.82
 - (기술)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첨단산업 육성은 필수 전략이 되고,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토교통 산업 전반의 혁신도 요구

⇒ '25년은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,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

2 추진 방향

정책
비전

**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내일을
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.**

방향

국민 안전 / 민생 안정 / 경제 회복 / 혁신 성장

주요
정책
과제

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

- 항공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 추진
- 국토교통 쏠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
-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

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

-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
-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
- 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
-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

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

- 8대 경제·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
-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

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

-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
-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·물류 서비스 지원
- 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

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

-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
- 주요 산업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
-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

◆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·관제·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, 교통,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 강화

① 사고 수습 및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 추진

- **(피해자 지원)** 생활지원,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('25.上)
 -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·지자체 등 합동 전담조직도 신설('25.1)
 - * 사고 조사, 유가족 지원 등 사고수습 과정 기록을 위한 백서 발간 추진
 - **(사고 조사)**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
 -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
 -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('25.上)
 - **(안전대책)**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민관합동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('25.4)
 - **(항공사)** LCC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(~1.31)
 - * 운항, 정비, 객실 훈련, 조종사·정비사·승무원 피로 관리 등
 - **(공항)**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(~1.24)
 - * 활주로, 터미널 등 공항시설, 항행안전시설, 조류 예방활동 실태 등
 - 광주·여수·포항경주공항 등의 방위각 시설 신속 개선 추진('25.1~)
 - * 무안공항은 시설복구와 연계하여 안전한 방식으로 설치 추진
 - **(관제)**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(~1.31)
 - * 관제인력, 교육훈련, 관제장비 실태, 관제위험지역관리, 활주로경보장치 등
 - **(규정)** 공항건설·운영 지침 검토 후, 미비점 개정 추진('25.上)
- ⇒ 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정책, 운항·관제, 시설 분야별 세부조치 시행

<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계획 >

일정	운항 부문	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부문
1.8~1.13	▶ 항공사 특별점검(12.30~1.10) * B737-800 보유 6개 항공사	▶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(1.2~1.8) * 주요 개선대상 7곳 집중 점검
1.13 ~ 1월末	▶ 로컬라이저 관련 단기 운항안전방안 시행 ▶ 전 항공사 종합안전점검(1.13~31) ▶ 관제기관 특별 안전점검(1.13~31)	▶ 전국 15개 공항 특별 안전점검(1.13~24) ▶ 15개 공항 시설개선 조치계획 수립(1월末)
~4월末	▶ 민관합동 혁신 위원회 발족	
	▶ 항공사·관제분야 안전 혁신방안 수립	▶ 공항시설 및 운영분야 혁신방안 수립
4월末~	▶ 항공안전 혁신방안 수립 발표(4월末) 및 분야별 세부조치 이행(정책, 운항·관제, 시설)	

② 국토교통 수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

- **(건설)** 인천검단 사고('23.4) 등에 따른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
 - **(설계)** 구조전문가*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 추진('25.上~)
 - *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1.3천명에 불과
 - ** 고용부의 국가자격 신설 절차에 착수하여 '26년 신설 완료
 - **(시공)**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방지 대책 마련('25.2)
 - * 건설 사망자(추락사고/전체) : ('23) 126 / 244명(52%), ('24) 104 / 204명(51%)
 - **(감리)** 전문성 제고, 감리 육성을 위해 국가인증 감리 선발(400명, '25.下)
- **(교통)** 전기차 화재·이륜차 사고 등에 따른 교통안전 관리 강화
 - **(전기차 화재)** BMS 화재위험 소방청 알림 서비스 시행('25.4),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 관리 실시('25.2) 등 화재 안전 강화
 - * BMS (Battery Management System) :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
 - **(이륜차)** 불법개조,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배출가스·소음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정기 안전검사* 시행('25.3)
 - * (주기) 사용신고 후 3년, 이후 2년마다, (항목) 제원 측정, 동일성 확인 등 19개 분야
- **(철도)** 열차의 탈선·장애 등 이상징후를 차량·선로·역사에서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안전시스템 확충*
 - * (열차) 차축 온도모니터링시스템(KTX 산천 38편성 설치), (선로) 차축온도검지장치 (동대구역 인근 2개소 설계 착수), (선로·역사) 열화상카메라(광명·대전·울산·익산역 설치) 등

- **(도로)** 실시간 변위 측정을 통한 사고위험 사전 감지를 위해 **비탈면 IoT 시스템 확충(100개), 교량 통합계측시스템 확대(36 → 38개소)**
- **(기반 시설)** 극한호우 대비 **지하차도, 비탈면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***(‘25.5)하고, **교량 등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**도 강화**(‘25.6)
 - * 설계빈도: (지하차도) 50 → 100년, (비탈면) 20 → 30년 / **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
- **(지하안전)** 노후 상수관로 등 **고위험지역 점검주기 단축***, **지반 탐사 지원사업 확대(2,300km → 3,200km)**를 통해 **취약구간 집중관리**
 - * 현재위험도 고려없이 1회/5년 → 개선위험도에 따라 최대 2회/1년 실시

③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 확대

- **(건축)** 공공건축물 ZEB 최저 인증등급 **상향(5 → 4등급)**,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한 **설계기준 강화**(‘25.12) 등 추진
 - * ZEB (Zero Energy Building) :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녹색건축물
 - ** 대상 : (공공) 연면적 1천㎡ 이상, 17개 용도, (민간) 연면적 1천㎡ 이상
- **(교통)** 디젤열차 대체를 위해 **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등을 본격화*** 하고, ‘27년 SAF 혼합의무화 대비 **SAF 사용목표 마련**(‘25.下)
 - * 수소전기동차(동력분산) 실증(200억원 ‘25~’27), 수소전기기관차(동력집중) 기술개발(289억원 ‘24~’28)

②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

◆ **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**

①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 및 안정적 시장 관리

- **(주택공급)** 공공·민간 역량을 총동원하여 **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**
 - **(공공신축매입)** 단기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입대를 ‘25년까지 **11만호**를 공급(‘24~’25)하고, **착공 및 입주자 모집 조기화***로 속도감 제고
 - * (조기 착공) 착공 시 대금 선지급 인센티브, (입주자 모집) 준공 후 → 착공 후 3개월
 -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**4.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**

- **(민간사업지원)** 인·허가 지원센터를 설치('25.上)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고, 건설사 선분양 제한* 등 규제 완화
 - * 건설사 단기(6개월 이하) 영업정지 시 선분양 제한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
 - HUG 자본확충을 통한 PF, 정비사업 등 공적보증 30조원 이상 확대
- **(시장 안정)** 관계기관 합동 가격·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, 민관협의체 운영, 현장실사^{중개업소} 등을 통해 시장 상황 밀착 모니터링

②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

- **(공공)** '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.2만호 신속 공급
 - 건설형 주택은 당초 계획^{13.5만호} 보다 확대된 14만호를 인허가하고, 착공도 전년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.4만호를 목표로 추진
 - 특히, 인허가·착공 계획 물량의 20%를 상반기에 조기 완료
 - * (인허가 신청) '24.上 1.3만호 → '25.上 2.8만호 (착공) '24.上 0.3만호 → '25.上 1.9만호
 - 3기 신도시 8천호 등 2.8만호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.6만호 지구계획 승인, 용인이동, 구리토평 등 7.1만호 지구지정
 -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3만호를 상반기 중 발표
 - 적정 단가 및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완료('25.1Q)
 - * 중심제 낙찰률 상향('25.3), 물가 반영기준 조정('25.3), 일반관리비 상향('25.3) 등
- **(민간)** 정비사업 활성화, 건설경기 회복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충
 - **(정비 사업)** 재건축 진단·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*('25.上)하고, 노후 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리모델링 제도 개선**도 추진('25.上)
 - * (재건축진단) 주민 거주 불편사항 추가 등 / (재개발요건) 무허가건물도 대상으로 포함
 - ** (예시) 사업절차 간소화, 변경허가 절차,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
 - **(노후계획도시)**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('25.下) 등 정비 본격화,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 추진('25.下)
 - **(건설경기 회복)** CR리츠 보증절차 개선 및 한도 확대*와 함께, 지방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 및 임대 활용방안도 검토
 - * CR리츠 대상 모기지보증 한도 상향(감정가 60 → 70%), HUG 특별상담창구를 통한 사업 컨설팅
 -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대상 보증료 경감(최대 20%, ~'25.12)

③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

- **(청년)** 최저 2%대 금리*로 분양가 80%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출시('25.上), 우수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** 공급
 - * 결혼(0.1%p) 및 출산(최초 0.5%p, 추가 출산 1명당 0.2%p) 시 추가 금리 인센티브
 - ** 국공유지·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,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.6만호(든든전세, 신혼신생아)
- 지방공사 택지를 청년층·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(연 1천호)
- **(신혼·출산)**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확대(신혼특공 20→35%) 하고, 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(연 7→12만호)
 - 신혼 특별공급 시 신청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을 배제하고, 출산 시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청약 혜택 확대
- **(고령자)** 고령화 추세 대응 고령자 맞춤 시설·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1.5천호 공모, 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공급
- **(전세사기)** 특별법 개정('24.9)에 따라 7.5천호 규모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 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을 본격화
 - 사전 예방을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위험도 지표*를 제공하고,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 물건정보도 확대(2.5 → 8만건)
 - * 보증 발급건수, 이행여부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 평가

④ 부동산 시장구조 선진화

- **(청약)** 무순위 청약(줍줍)은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이 가능토록 개선('25.2)
 - 부양가족·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징구 및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청약 근절('25.上)
 - * (現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·초본 등 → (改)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
- **(정책자금 관리)** 주택기금 디딤돌(구입)·버팀목(전세) 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금리 차등화 등 검토
 -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 상환 능력(소득·기존대출 등)을 고려하도록 HUG 전세대출 보증 개선('25.下)

- 대출 조기상환 시 부담이 없도록 **중도상환 수수료* 면제**(~'25.12)
 - * 디딤돌대출 실행 후 3년내 중도상환시, 상환 원금에 비례하여 수수료 1.2% 부과
- **(신유형 장기임대)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 도입***(25.上)
 - *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선도사업 3천호(실버스테이 1.5천호 포함) 공모 추진(25.下)
- **(부동산 PF) 사업성 평가 강화*, 정보시스템 구축(ISP) 등 건전성 제고**
 - * 연구용역(2~9월) → 업계 TF(3분기) → 가이드라인 배포 및 평가기관 지정 방안 마련(25.下)
- PF 구조개선을 위한 **인센티브* 부여** 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지원
 - *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,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

③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.

◆ 8대 경제·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,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

① 8대 경제·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추진

- **(공간전략) 全 국토에 경쟁력 있는 8대 경제·생활권***을 육성
 - * 5개 초광역권(수도권+4대 초광역권), 1개 광역권(전북), 2개 특별권(강원, 제주)
- 지역 주도의 권역별 경제·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, **국가 계획*과 연계**(25.下)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확대
 - * 국토종합계획 수정(25.下), 철도망계획 수립(25.下), 국가도로망계획 수정(25.下) 등
- ⇒ 지역별 이동성을 강화하는 도로, 철도 사업을 포함한 **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,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** 등 수립(25.下)
- **(성장거점)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성장거점 조성 확대**
 - **(산단) 용인 반도체 산단은 보상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 추진, 14개 지방 산단은 예타 등 추진계획 구체화**
 - * 관계부처 합동 기반시설 분과(국토부 1차관)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 밀착 관리
 - ** ①예타면제 2곳[고흥·울진] : 산단계획 승인 신청(25.上) / ②신속예타 신청 5곳[광주대구·대전·안동·완주] : 예타완료(25) / ③강릉·홍성 등 7곳 :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추진(25)

- **(토지이용) GB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전략사업 선정(‘25.2),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공간혁신구역 추가** 발굴(‘25.下)**

*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GB 해제 총량 예외 적용, 환경평가 1·2등급지 해제 가능

** 철도지하화·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도시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

- **(성장거점)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,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·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등 종합발전계획 마련(‘25.下)**

- 지역 - 기업 -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위한 **한남대^{1호} 캠퍼스혁신파크** 기업 입주 개시(‘25.3), **2호 준공**(한양대 ERICA, ‘25.下)

- **(기존 거점)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, 국회세종의사당 등 조성을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 시행(‘25.上)**

-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**20만평을 추가 확대(‘25.下)**하고,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수립(‘25.下)

- **(광역교통망) x-TX(지방권 GTX) 선도사업인 충청권 CTX(대전-세종-청주공항)를 포함한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 적극 추진**

▶ **(공사 중) 태화강-북울산 공사 중(‘24.12~ , ‘25.下 개통),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(계룡-신탄진) 공사 중(‘23.12~)**

▶ **(예타 등) CTX 민자적격성 완료(‘25.下), 부산-양산-울산 예타 중(‘23.6~), 동남권 순환(진영-울산) 예타 중(‘24.12~), 광주-나주 예타 중(‘23.6~), 용문-홍천 예타 중(‘24.2~)**

▶ **(추가 검토) 태화강-부전-마산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열차 추가운행 검토**

- **서대전IC - 두계3가(계룡) 광역도로 개통(‘25.12), 조정(김해)-화명 및 다사-왜관 광역도로(공사 중)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**

②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

- **(조기 집행) 행정절차 사전 이행, 선금 최대 지급 등을 통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 신속 집행(SOC 예산의 70%, 12조원)**

* **(도로)** 함양울산(757억원) 등 상반기 4.2조원(1Q 2.5조원) **(철도)** GTX-B(2,700억원), 춘천-속초(1,440억원) 등 상반기 4.1조원(1Q 2.1조원)

- **실집행을 제고를 위해 LH_{12.3조원}, 철공_{3.5조원}, 도공_{2.7조원} 등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% 집행(18조원, 정부지원 예산 포함)**

- **(노후공간 정비) 철도지하화**는 지자체 협의회가 완료되는 대로 **1차 사업 발표('25.1Q)**, 지자체 사업제안을 받아 **전국 단위 종합계획 수립('25.12)**
 - 뉴:빌리지는 **선도사업(32곳) 착수**,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 추진
 - *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시 추가 국비지원(최대 30억원)
 - 지역 쇠퇴를 가속하는 **빈 집 정비**를 위해 빈집은행, 빈집관리업, 빈집특화형 뉴:빌리지* 도입 등 **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('25.上)**
 - * ①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②빈집을 포함하여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 추진
- **(지역 활력 회복) 주거+생활인프라+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 활력타운의 대상 지역 및 부처 연계사업 확대('25.5, 10곳 선정)**
 - * (지역) 성장촉진지역 70개 지자체 → 7개 도 120개 지자체, (연계사업) 18 → 22개
 -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**지역사랑 철도여행*** 참여 지역 확대(23 → 28개, '25.上), **교외선 자유여행패스 도입('25.上)**
 - * 열차, 숙박, 렌터카 등 통합 할인(최대 56%) 등 / 곡성, 논산, 보령, 안동, 울릉 추가
 - 쇠퇴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**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대상 확대(상가 → 주상복합, '25.1)**, **소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(~'26)**

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- ◆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,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
- ◆ 교통약자 및 물류 현장 종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

①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

- **(철도) 경부·호남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“4×4 고속철도망” 구축 추진**
 - * (중축) 서해전라선, 중부내륙선, 중앙선, 동해선, (횡축) 서울속초선, 경강선, 대구광주선, 경전선
 -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및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**고속철도망 구축 가속화**
 - ▶ (중축) 동해선축 KTX-이음 투입('25.下)으로 부전~강릉 3시간대 연결, 중부내륙선축 수서~광주, 김천~거제 착공 및 문경~김천 설계 추진('25.下)
 - ▶ (횡축) 경전선축 보성~임성리 개통('25.下), 대구광주선 예타 면제 추진
 - ▶ (수도권) GTX - B·C 신속 착공 등 사업추진 속도 제고

- **(도로)** 포항-영덕 등 고속도로 2개, 태백~미로 등 국도 18개 개통 및 고속도로 2개, 국도 16개 착공 등 간선도로 지속 확충*

* (개통) 포항~영덕('25.12), 새만금~전주('25.12), 무계~삼계('25.12), 충청내륙('25.下) 등
(착공) 부산신항~김해('25.12), 계양~강화('25.12), 남양주~춘천('25.12) 등

- **(공항)** 기존에 계획 중인 신공항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

* 가덕도신공항 착공('25.下), TK 신공항 설계 착수('25.上), 새만금공항 착공('25.上) 등
**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·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

②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·물류 서비스 지원

- **(교통약자)**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위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('25.上) 및 전국 통합예약시스템('25.5, 시범운영)으로 예약 편의 제고

- 임산부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KTX·일반열차 지정 좌석 신규도입('25.下)

- **(물류사각지대)** 산지 등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배기사의 여러 택배사 물품 동시 배송을 허용('25.上)하고, 섬 등에 드론 택배도 확대*

* 드론 배송(섬, 공원, 항만 등) 확대('24, 50개 → '25, 85개 이상)

- **(교통비 부담 완화)** K-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 및 적용 지역 확대

* 할인 혜택 : 2자녀 30%, 3자녀 이상 50% 환급 / 적용 지역 : 189개 → 210개 지자체

- **(항공 서비스)** KE-OZ 기업결합 후속으로,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(年 2회)를 통해 품질감독 강화, 항공소비자 보호방안 2.0도 마련('25.上)

-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확대, 양손이 가벼운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 개시 등 공항 서비스 향상*

* (스마트 출국) 22 → 188개소('25.6), (홈투홈) 집 ↔ 해외숙소 수하물 배송 개시('25.10)

- **(도로 환경)** 내비게이션, 자율주행 등을 위한 터널 내 GPS 최초 도입('25.下),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(10개소) 등 끊임없는 운행 환경 조성

③ 물류 종사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

- **(택배)**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물품 분류작업 범위 명확화 등 표준계약서 개정('25.1), 위탁구역 등 주요사항은 계약서 반영 의무화

- **(배달)** 안전한 배달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배달플랫폼사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확인 의무화('25.下), 저렴한 공제보험상품 확대*('25.上)

* (現) 시간제·연간제 상품 출시('24) → (改) 렌탈·리스 차량 대상 상품 출시

- **(화물)** 화주-차주 직거래를 통한 다단계 축소 및 허위매물 등 부당 행위로부터 차주 보호 등을 위해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*('25.下)

* (現) 운송, 주선, 운송가맹사업 → (改) 기존 +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(신설)

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.

- ◆ 국민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미래 新산업·新기술 육성
- ◆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

① 미래를 선도해 나갈 新산업 육성

- **(자율차)** 자율주행 상용화(Lv4) 실현을 위한 다각적 실증 추진
 -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개시('25.下)
 - * (1단계) 운전석 탑승('24.11~) → (2단계) 조수석 탑승('25.上) → (3단계) 완전 무인
 - 전국 고속도로(약 5,200km)를 시범운행지구*로 지정하여 도심 구간 50km/h → 최고 100km/h의 고속·장거리 자율주행 기술 실증
 - *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고속도로 IC 등 일부 구간은 제외
 - 농어촌, 새벽·심야시간 등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확대(4곳 → 7곳)
 - * (기존) 서울(심야 택시, 새벽·심야버스), 하동(농촌버스) → (확대) 강릉, 충북, 동작구 등
- **(드론)** 모터, 배터리 등 국내 수급을 위한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('25.9)하고,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(47 → 70곳)
- **(UAM)**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('25.下), 교통·관광·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 다각화 및 사업준비 지원('25.下, 지자체 2개)
- **(스마트시티)** 기존 도시에 재정 지원, 규제 특례,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1개소 선정('25.上, 20억원)

② 주요 산업 체질 개선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

- **(항공산업)** 인천공항 국제선 확대, 환승축 강화로 허브 기능 강화
 - * (국제선) 직항 다변화, 서남아 등 신흥시장, (환승축) 대양주-韓-중앙아 등 신규 모델
 -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의 MRO 산업 강화 방안 마련('25.下)
- **(건설산업)**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·활용 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, BIM*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·확대 시행('25.下)
 - * BIM 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 : 3차원 모델 기반 시설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
 - 탈현장 건설* 촉진을 위해 고속도로 교량 현장(세종-포천 등) 시범적용
 - * OSC (Off-Site Construction) : 건설자재를 미리 생산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방식
- **(공간정보)** 공장 인허가 시 디지털 트윈국토를 기반으로 토지, 건축, 환경 등 각종 규제를 사전 검토하는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운영('25.2)

③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- **(해외건설)** K-City, K-철도 등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통해 '25년 500억불 달성 추진
 - * (K-City) 스마트시티 - 엔터·음식·의료 등 결합, (K-철도) 설계·건설·운영·차량 패키지

구 분	수 주 전 략
중 동	▲ 한-사우디 인프라·물류위원회,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- (주요 국가) 사우디(도시개발), 이라크(재건사업), UAE(고속철도) 등
아시아	▲ ODA 및 유상원조 연계, 韓-중앙亞 정상회의('25, 서울) 등 - (주요 국가) 우즈벡(교통), 베트남(신도시, 산단, 고속철도), 말레이(공항)
유럽	▲ 대사관 등 정보 지원 및 네트워킹,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- (주요 국가) 체코(원전·고속철도), 불가리아(원전), 폴란드(플랜트), 튀르키예(인프라)
중남미	▲ K-철도 원팀 파견 및 철도 건설·운영 등 쏘 분야 패키지 진출 - (주요 국가) 파나마·엘살바도르·페루(고속철도, 공항철도) 등
아프리카	▲ 유·무상 ODA 기반 협력 강화 및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성 - (주요 국가) 케냐(교량), 르완다(도로), 탄자니아(철도교육센터) 등

- PIS 펀드 1단계^{1.5조원} 투자 完, 2단계^{1.1조원} 조성 등 금융지원 확대
- **(글로벌 협력)** 2025 APEC경주 개최를 위해 각국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(김해·대구공항 등), 주변도로 정비(174km), 열차 증편(KTX 포함) 등 지원
 - GICC(인프라)·WSCE(스마트시티) 등 국제 행사를 통해 국제 위상 확립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01 국민 안전 확보



안전 관리 강화

- **항공** 피해자 지원 특별법 마련
정부·지자체 합동 전담조직 신설
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
항공사·공항 등 긴급점검
민관합동 안전 혁신방안 마련
- **건설** 추락사고 대책 마련
국가인증감리선발
- **철도** 차축온도 감지 등
첨단 안전시스템 확충
- **전기차** BMS 화재위험 일림
배터리 인증제 시행
- **도로** 비탈면 IoT 및 교량
통합계측 시스템 확충
- **이륜차** 정기안전검사 시행
- **지하** 고위험지역 점검강화
지반탐사 확대(총 3,200km)

02 주거 안정



주택 공급 확대

- **공공주택** 역대 최대 25.2만호 공급
본청약 2.8만호
- **신축매입** 11만호 공급(24~25)
- **공공택지** 신규 3만호 발표
- **리모델링** 절차 등 제도개선 추진

맞춤형 주거지원

- **청년**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
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
- **출산** 출산가구 주택공급(총 2만호)
- **고령자** 실버스테이 1.5천호 공모
- **전세사기** 피해주택 7.5천호 매입

시장구조 선진화

- **청약** 무순위(중도) 제도개선
부정청약 근절
- **대출** 중도상환수수료 연제
지역별 금리차등화 검토
- **PF사업** 사업성 평가 강화

03 지역 경제 활성화



혁신 성장거점 조성

- **초광역권** 8대 경제생활권 육성
(권역별 계획 → 국가계획 반영)
- **성장거점** 옹진 반도체 국가산단 보상 착수
GB 지역전략사업 선정
도심융합+기회발전특구 연계

지역경제 활력 회복

- **조기집행** SOC 예산 70%(12조원)
공공기관 예산 57%(18조원)
- **주거지 정비** 철도지하화 1차 사업 발표
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
뉴-빌리지 - 정비 연계(+30억원)
- **지역경제** 지역활력타운 지원 확대
(120개 지자체 대상, 22개 연계사업)

04 교통 편의 제고



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제고

- **철도** 전국 거점 연결 4x4 고속철도망 구축
- **도로** 고속도로 2개·국도 18개 개통(총 연장 231km)
- **교통** 터널 내 GPS 최초 도입
K-패스 디지털화 도입
- **항공** 스마트 출국·홍투출 서비스 확대

교통약자·물류 종사자 보호

- **장애인**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
전국통합예약시스템 시범운영
- **임산부** KTX·일반열차 지정좌석 신설
- **택배** 근로자 물품 분류작업 범위 명확화
- **배달**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
- **화물** 차주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

05 산업 경쟁력 제고



新산업 육성

- **자율차**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자율운행(상업)
전국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(100km/h 고속실증)
농어촌, 새벽·심야 시범운행 확대(총 7곳)
- **드론** 특별자유화구역 확대(총 7곳)
국내 드론 제조·생태계 조성방안 마련
- **스마트시티** 특화단지 선정

산업 경쟁력 제고

- **항공산업** 인천공항 함승속 강화
MRO 산업 강화 방안 마련
- **해외건설** PIS펀드 2단계 1.1조원 조성
'25년 해외수주 500억불 달성
- **공간정보**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
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

